

www.kef.or.kr

2025 e경제 · 경영정책 리포트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Weekly Newsletter





◆ 경총, 「임금HR연구 2025년 상반기호」 발간 (3.4)

(임금·HR정책팀 02-3270-7455)

* 보도자료는 경총플라자(www.kefplaza.com)에 게시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3월 4일 “디지털 전환기 HR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정기간행물 「임금HR연구」 2025년 상반기호를 발간
- 경총은 AI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향후 HR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번 「임금HR연구」 상반기호 특집주제를 “디지털 전환기 HR이슈와 전망”으로 선정
 - 주제발표를 맡은 항공주 딜로이트컨설팅 상무는 “AI 중심의 디지털 기술은 조직의 혁신을 촉진하고 성과를 극대화하는 핵심동력”이라고 진단하고, “AI가 성숙해지고 조직 전반에 확산될수록 HR은 새로운 통찰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창조적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 연구논단에는 디지털 전환기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HR 이슈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HR 부문별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다섯 필진의 글을 수록
 - ※ 연구논단 주제와 집필진
 - 스킬 중심 인재관리와 보상 연계방안 : 손송민 머서코리아 상무
 - AI 기반 초개인화 학습의 핵심 트렌드 : 김주호 KAIST 전산학부 교수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리더십 : 오상진 경희대 인적자원경영MBA 주임교수
 - People Analytics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이중학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AI시대 HR이 고려해야 할 새로운 인사노무 이슈 :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AI센터장
 - 사례연구에서는 LG CNS와 미국 주요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소개하고, 특집논단에서는 백진기 한독 대표이사가 지난 40여년 간의 경험을 토대로 HR의 역할과 미래상에 대한 생각을 공유

문의 : 경제분석팀(02-3270-7376)

< contents >

- ▶ 통계청,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3.4)
- ▶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2월 수출입 동향」 발표 (3.1)
- ▶ 통계청, 「2025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3.6)
- ▶ 한국은행, 「2024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3.5)

◆ 통계청,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3.4)

- **(생산)** 2025년 1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2.3%), 서비스업(△0.8%)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 대비 2.7% 감소(전년동월대비 3.5% 감소)
 - *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 기록
 - ▶ 전산업생산지수 증감률 추이(% , 전월대비) : △0.3(24.9)→ 0.5(10)→ △1.2(11)→ 1.7(12)→ △2.7(25.1)
 - 광공업생산은 기타운송장비(2.8%)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기계장비(△7.7%), 전자부품(△8.1%)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2.3% 감소(전년동월대비 4.1% 감소)
 - 서비스업생산은 정보통신(4.7%) 등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도소매(△4.0%), 운수창고(△3.8%)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0.8% 감소(전년동월대비 0.9% 감소)
- **(제조업 평균가동률)** 2025년 1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8%로 전월대비 0.5%p 상승
 - ※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 73.3(24.9)→ 73.1(10)→ 71.1(11)→ 73.3(12)→ 73.8(25.1)
- **(제조업 재고율*)** 2025년 1월 제조업 재고율은 110.1%로 전월대비 6.5%p 상승(전년 동월대비 2.2%p 상승)
 - * 제조업 재고율은 제조업 재고지수를 제조업 출하지수로 나눈 값으로, 출하된 물건보다 쌓인 물건이 더 많을 때 100%를 초과.
 - ※ 제조업 재고율 추이(%) : 106.6(24.9)→ 111.0(10)→ 113.6(11)→ 103.6(12)→ 110.1(25.1)

- **(소매판매)** 2025년 1월 소매판매는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1%)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2.6%), 화장품 등 비내구재(△0.5%)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0.6% 감소(전년동월대비 보합*)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추이(% , 전월대비) : 0.7('24.9)→ △0.7(10)→ △0.7(11)→ 0.2(12)→ △0.6('25.1)

*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2023년 12월(△0.6%)부터 2024년 12월(△2.5%)까지 13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1월에는 보합 수준에 그침.

- **(설비투자)** 2025년 1월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12.6%) 및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7.5%)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14.2% 감소*(전년동월대비 3.1% 감소)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추이(% , 전월대비) : 5.7('24.9)→ △3.4(10)→ △1.7(11)→ 7.5(12)→ △14.2('25.1)

* 2020년 10월(△16.7%) 이후 4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 기록

- **(건설투자)** 2025년 1월 건설투자는 건축(△4.1%) 및 토목(△5.2%)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대비 4.3% 감소*(전년동월대비 27.3% 감소**)

* 건설투자는 전월대비 기준으로 '24.8월(△2.1%) 이후 6개월 연속 감소

▶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 전월대비) : △2.0('24.9)→ △0.5(10)→ △3.1(11)→ △1.9(12)→ △4.3('25.1)

** '98.10월(△27.6%) 이후 26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 기록

- **(경기지수)**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4(전월대비 0.4p 하락),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4(전월대비 0.3p 하락) 기록

◆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2월 수출입 동향」 발표 (3.1)

- **(총괄)** 2025년 2월 수출은 526.0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 증가*(1~2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7% 감소)했으며, 수입은 483.0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 수출 증감률 추이(% , 전년동월비) : 4.6('24.10)→ 1.3(11)→ 6.6(12)→ △10.2('25.1)→ 1.0(2)

- 2025년 2월 무역수지는 43.0억 달러 흑자*를 기록

* 무역수지 추이(억 달러) : 31.7('24.10)→ 55.7(11)→ 64.9(12)→ △18.6('25.1)→ 43.0(2)

- **(품목별)** 15대 주력 품목(전체 수출의 약 77%를 차지) 중 무선통신기기(42.3%), 컴퓨터(28.5%), 자동차(17.8%), 바이오헬스(16.1%)를 제외한 11개 품목의 수출이 모두 감소

※ 2025년 2월 15개 품목별 수출증감률(% , 전년동월대비)

: (무선통신기기) 42.3, (컴퓨터) 28.5, (자동차) 17.8, (바이오헬스) 16.1, (섬유) △0.7, (석유화학) △2.2, (반도체*) △3.0, (자동차부품) △4.1, (가전) △4.3, (철강) △4.4, (디스플레이) △5.8, (이차전지) △9.6, (선박) △10.8, (석유제품) △12.2, (일반기계) △12.3

* 반도체 수출은 '23.10월(△3.1%) 이후 16개월만에 감소로 전환

▶ 반도체 수출 증가율 추이(% , 전년동월대비) : 40.3('24.10)→ 30.8(11)→ 31.5(12)→ 8.1('25.1)→ △3.0(2)

- **(국가별)** 9대 주요 수출 시장인 對중국(△1.4%), 對일본(△4.7%), 對중남미(△6.3%), 對EU(△8.1%), 對CIS(△16.4%) 수출은 감소했으나, 對미국(1.0%), 對아세안(12.6%), 對인도(18.6%), 對중동(19.6%) 수출은 증가

◆ 통계청, 「2025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3.6)

- 2025년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0% 상승
 - ※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비) : 1.3('24.10)→ 1.5(11)→ 1.9(12)→ 2.2('25.1)→ 2.0(2)
- **(지출목적별)** 기타 상품 및 서비스(4.1%), 음식 및 숙박(2.9%),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2.3%), 교통(2.2%) 등 12개 부문이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
- **(품목성질별)** 상품은 전가가스수도(3.1%) 등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9% 상승했고, 서비스는 개인서비스(3.0%)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1% 상승
- 2025년 2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9% 상승했고,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

◆ 한국은행, 「2024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3.5)

-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2.0% 성장*
 - * 2024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지난 속보치('25.1.23)와 동일
 - ※ 최근 5년('20~'24)간 연간 경제성장률 추이('20~'22 확정치, '23~'24 잠정치) : △0.7%('20)→ 4.6%('21)→ 2.7%('22)→ 1.4%('23)→ 2.0%('24)
- 민간소비는 재화소비 줄었으나, 서비스 소비가 늘어 전년대비 1.1% 증가.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가 모두 늘어 1.6% 증가했고,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은 늘었으나 건물건설이 줄어 3.0% 감소
- 수출은 IT 품목(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7.0% 증가했고, 수입은 에너지류(원유, 천연가스 등),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2.5% 증가
- 지출주체별 성장기여도를 살펴보면, 2.0% 성장률 가운데 민간에서 1.6%p, 정부에서 0.4%p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549.1조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했으며, 달러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6% 성장한 1조 8,689억달러 기록
-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995.5만원으로 전년대비 5.7% 늘었으며, 달러기준으로는 36,624달러로 전년대비 1.2% 증가

※ 최근 5년('20~'24)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추이(달러, '20~'23 확정치, '23~'24 잠정치)
: 32,204('19)→ 32,004('20)→ 35,523('21)→ 32,886('22)→ 33,745('23)

- GDP디플레이터는 전년대비 4.1% 상승

○ 2024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1% 증가(전년동기대비 1.2% 증가)

※ 2024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지난 속보치('25.1.23)와 동일. 다만, 수출(+0.5%p), 정부 소비(+0.2%p), 수입(+0.2%p) 등이 상향 수정된 반면, 건설투자(-1.3%p), 설비투자(-0.4%p) 등은 하향 수정

문의 : 노사협력팀(02-3270-7417)

< contents >

- ▶ 고용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계획
- ▶ 노동계 정치투쟁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 증가 우려
- ▶ 개별기업 노사관계의 정치쟁점화 증가
- ▶ 성과급을 둘러싼 산업현장 노사갈등 증가
- ▶ 임금교섭 타결현황

◆ 고용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계획

- 고용부는 「2025년 근로감독 종합계획」(2. 26)을 통해 고의·상습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3. 5 익명제보 등을 통해 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 근로감독 기간 : '24. 12~'25. 2 / 근로감독 대상 : 120개 사업장

- 근로감독 결과 89개 사업장에서 총 144억원(5,692명)의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 13개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등 사법 절차 진행

- 고용부는 올해 고액 임금체불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 위반과 산업안전 위반을 함께 단속하는 '통합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

◆ 노동계 정치투쟁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 증가 우려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양 노총과 주요 산별조직들은 탄핵인용 주장과 현안 요구를 내세운 정치투쟁 강화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장외집회를 중심으로 대통령 퇴진 투쟁을 지속하고 있고, 탄핵인용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대응 활동도 병행
 - ※ 양 노총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경북공역 인근 등에서 주말 도심 집회 지속
- 양 노총은 3. 4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파면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정치투쟁에 주력
- 금속노조는 3. 4 「정기대의원대회」에서 ①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결정시 즉시 총파업 결의, ② 7월 노조법 전면개정을 내세운 정치파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 ※ 민주노총도 지난 2. 11 「정기대의원대회」에서 7월 총파업 추진 방침을 결정
- 금속노조는 ① 전국노동자대회(3. 15), ② 확대 간부 상경투쟁(5말 6초), ③ 최저임금 인상 투쟁(6월) 등을 통해 7월 총파업 투쟁 분위기 확산 계획
- 또한, 보건의료노조도 지난 2. 26~27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해 2025년 주요 사업기조를 ‘정권 퇴진’으로 설정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강화 등을 내세운 7월 총파업 방침 결정
- 한편,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는 노조법 제2·3조 개정, 안전운임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정부 규탄 집회 등 투쟁 동력을 높여간다는 계획
 -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는 3. 7~8 화물차량 등을 동원한 상경행진, 3. 8 국회 앞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대회 실시 예정

◆ 개별기업 노사관계의 정치쟁점화 증가

- 산업현장에서 고용보장을 주장하는 노동계 투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정치권을 활용한 문제해결 시도 지속
-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회사 관계사로의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24. 1. 8부터 고공농성을 진행중이며 야당 국회의원과의 간담회('24. 12. 3)등을 통해 국회 차원의 문제해결 요청
 - ※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닛토덴코 그룹의 자회사로 LCD 편광 필름 등을 생산해 음.

※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지난 2022년 공장 화재로 생산동 내부 및 설비가 전소됨에 따라 법인 청산 의결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2. 13부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진보당 등 정치권 인사들은 농성현장 방문(2. 17), 국회 기자회견(2. 28) 등을 통해 당 차원의 문제해결 방침 표명

※ 세종호텔은 2021년 8월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한 경영상 해고(12명)를 실시했고, 노조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최종 패소

○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 4 당내 「전국노동위원회」 출범

- 최철호 한국노총 전격연맹 위원장이 전국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노총 주요 산별조직 간부들이 부위원장으로 활동 예정
- 한편, 전국노동위원회 참여 인사들은 출범식 결의문을 통해 정년연장, 주4일제 추진 입장 표명

◆ 성과급을 둘러싼 산업현장 노사갈등 증가

○ 국내 철강 산업이 중국산 저가 철강재와의 경쟁, 관세 리스크 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당진하이스코지회)는 과도한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며 2. 1부터 파업 지속

- 회사는 기본급의 450% + 1,000만원(1인당 2,650만원 수준)으로 성과급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현대차 수준의 성과급을 주장하며 노사 간 이견 지속
- 이에 회사는 지회의 2. 1부터 지속된 파업에 대응해 2. 24부터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의 일부라인에 대해 부분적 직장폐쇄 실시
- 한편, 금속노조는 3. 5 야당의원과 기자회견을 개최해 직장폐쇄 철회를 주장하는 등 현대제철지회의 투쟁에 대한 지원 강화

○ 반면, 삼성전자는 성과급 제도개선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으로 임단협이 장기화 됐으나, 삼성전자는 3. 5 교섭 마무리

- 삼성전자 노사는 ▲임금 5.1%인상, ▲자사주 30주 지급, ▲복지포인트 200만원 지급, ▲성과급 제도 개선 노사공동 TF 구성 등에 합의

※ 삼성전자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2. 28~3. 5)에서 투표 조합원 87.7% 찬성으로 임단협 합의안(2023년·2024년·2025년)을 가결시킴

◆ 임금교섭 타결현황

고용노동부 발표, 임금결정현황조사 결과	
▶	협약임금 인상률*은 고용부가 100인 이상 사업체 10,587개를 대상으로 집계, 2024년도 1~11월 임금결정현황 제출 사업체는 4,592개(43.4%)
	* 노사 협약으로 정한 사전적 임금(정액급여, 고정상여금 기준) 인상률
▶	2024년 1~11월 누계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잠정치)
-	(전체) 4.1%, 전년동기 4.5% 대비 0.4%p 하락
-	(규모별) 100~299인 3.8% (전년동기 4.7%), 300인 이상 4.1% (전년동기 4.5%)
	* 1,000인 이상 4.2% (전년동기 4.4%)

< 개별기업 임금교섭 타결현황 >

(2025. 3. 5 현재)

번호	업 체 명	업종	일시	상급단체	내 용
13	삼성전자	제조	3.5	한국노총	▶ ('25년) 임단협 타결 · 임금 5.1% 인상(Base-up 3.0%, 평균 성과인상률 2.1%) · 자사주 30주 지급 · 패밀리넷몰 200만 포인트 지급 · 고정시간외수당 축소(16.5시간→14시간) 등
12	SK이노베이션	제조	2.24	한국노총	▶ ('25년) 임협 타결 · 임금 2.3% 인상 등
11	KB국민은행	서비스	1.20	한국노총	▶ ('24년) 임단협 타결 · 임금 2.8% 인상 · 성과급 250%(월 기준임금 기준)+200만원 지급 등
10	HD현대오일뱅크	제조	1.15	한국노총	▶ ('24년) 임단협 타결 · 기본급 3.6% 인상 · 위기 극복 격려금 350만원 지급 · 임단협 타결 격려금 기본급의 100% 지급 등
9	하나은행	서비스	1.13	한국노총	▶ ('24년) 임단협 타결 · 임금 2.8% 인상(일반직 기준) · 특별성과급 기본급의 280% 지급 · 특별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
8	포스코	제조	12.27	한국노총	▶ ('24년) 임단협 타결 · 기본급(Base-up) 10만원 인상 · 경영목표 달성 동참 격려금 30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포함) 지급 · 노사화합 격려금 300만원 지급 등

7	신한은행	서비스	12.27	한국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임단협 타결 · 임금 2.8%~3.5%* 인상 * 직군별 임금인상률로 일반직 2.8%, RS직 3.0%, 사무직군 3.5% · 경영성과급 기본급의 280%(현금 230%+주식 50%) 지급 등
6	HD현대미포	제조	12.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임단협 타결 · 기본급 13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 격려금 470만원 지급 등
5	HD현대중공업	제조	11.27	민주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임단협 타결 · 기본급 13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 격려금 470만원(상품권 50만원 포함) 지급 · 설·추석 귀향비 인상(각 50만원→70만원) 등
4	SK하이닉스	제조	10.29	한국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임단협 타결 [전임직(생산직) 노조] · 임금 5.7% 인상 · 격려금 450만원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자녀 수와 관계없이 25일(3회 분할) 지원 · 장기 근속 휴가 확대(7일→10일) 등
3	한화오션	제조	10.13	민주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임단협 타결 · 기본급 11만 7,404원 인상 · 타결 일시금 및 상생격려금 370만원 지급 등
2	르노코리아	제조	10.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임단협 타결 · 기본급 8만원 인상 · 신차 출시 격려금 300만원 지급 · 변동 PI 최대 100%(약 200만원) 지급 · 스페셜 인센티브 250만원 지급 등
1	기아	제조	10.10	민주노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임단협 타결 · 기본급 11만 2,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 경영성과급(기본급의 300%+1,000만원) 지급 ·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기본급의 100%+280만원) 지급 · 특별성과격려금(기본급의 100%+500만원) 지급 ·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



문의 : 근로기준정책팀(02-3270-7390), 의정협력팀(02-3270-7382)

< contents >

○ 법안동향

- ▶ [2208518]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민), 2.27)
- ▶ [220853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국), 2.27)
- ▶ [22085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국), 2.27)
- ▶ [220857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민), 2.28)
- ▶ [2208626]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민), 3.4)

○ 국회동향

- ▶ 3월 임시국회 일정

○ 판례동향

- ▶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93092 판결

○ 법안동향

◆ [2208518]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민), 2.27)

- (발의 이유) 현행법(외국인고용법 제18조)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확대할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現 ‘3년’ → ‘5년’으로 연장

◆ [220853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국), 2.27)

- (발의 이유)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와 임원 선출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필요
- (주요 내용) ① 노동조합 규약에 회계감사원 및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사항 등을 포함
② 재정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現 ‘3년’ → ‘5년’으로 확대
③ 총회의 의결사항에 ‘회계감사원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거 및 해임’ 포함
④ 노동조합이 1인 이상의 회계감사원을 두도록 규정
⑤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나 1천 명 이상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에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⑥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5년 이상 해당 조합의 임원이었던 자는 제외하며, 총회의 의결로 선출
⑦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나 1천 명 이상의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은 임원 선거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
⑧ 노동조합이 ‘위법한 규약 및 결의처분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⑨ 단체협약 당사자가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22085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국), 2.27)

- (발의 이유) 연구개발직 및 과학·학문·예술분야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으로서, ‘고도의 지식 또는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과학·학문·예술분야 전문직에 종사자’ 및 ‘정보통신분야 시스템 설계·개발업무에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220857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민), 2.28)

- (발의 이유) 현행법(상법 제360조의24)상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주주가 보유중인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소수주주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매도 청구권의 행사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주주의 범위를 現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 보유’ →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9% 이상 보유’로 확대

◆ [2208626]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민), 3.4)

- (발의 이유) 현행법(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상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해 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 제기
- (주요 내용) ‘배우자 난임치료 휴가’ 신설
 - ① 근로자가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의 난임치료를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 ② 연간 3일 이내(1일 유급)
 - ③ 배우자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국회동향

◆ 3월 입사국회 일정

- 3월 입사국회가 3.5부터 시작되었으며, 약 3.13 / 3.20 / 3.27 세 차례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 판례동향

- ◆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93092 판결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기본급 인상이 함께 이루어진 경위와 그 대가관계 여부, 임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는지 등 기본급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이를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사는 전문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B는 A사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8. 31. 정년퇴임하였음. ○ A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간제 교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을
------	---

	<p>정하는 보수규정을 운영하였으며, 매 학년도별로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과 수당을 정해 보수를 지급해 왔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사는 기간제 교원에게 연간 기본급의 300%(7월, 12월 제외하고 매달 30%씩)를 상여수당으로 지급해 오다가, 2012. 1. 17. 이사회회의결을 통해 상여수당을 기본급의 100%(3월과 9월의 기본급의 50%씩)로 조정하였음(이하 ‘2012년 취업규칙 변경’이라 함). - 2013학년도부터는 보수표에서 상여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지급을 중단하였음(이하 ‘2013년 취업규칙 변경’이라 함). - 또한, A사는 2012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동일한 기본급 표를 유지하며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동결하였음. <p>○ B는 A사의 2012년 및 2013년 보수규정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시행되어 무효이므로 변경 전 취업규칙인 2011년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상여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사는 2012년 보수규정 변경을 통해 종전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것은 이는 봉급과 상여수당 간 대가관계에 따른 조정이며, 보수총액 기준으로 보면 이는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고, 2013년부터 상여수당 지급이 중단되었고 이를 모든 기간제 교원들이 근로조건으로 수용하여 ‘상여수당이 없는 근로조건’이 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주장함. <p>○ 원심은 기본급과 상여수당의 성격이 달라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삭감 간 대가관계나 연계성을 인정할 수 없고, A사가 주장하는 보수총액 감소 여부를 기준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A사의 2012년 상여수당 감액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교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또는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2012년 및 2013년 보수규정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 환송함.
<p>판결요지</p>	<p>■ 관련 법리</p> <hr/> <p>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등 참조</p>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한 요소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hr/>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판결 요지

○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파기환송

- 2012년 취업규칙 변경으로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감액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기본급과 상여수당은 하나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비교 가능한 것에 해당하므로 대가관계를 부정하기 어려운 점,
-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 전체 보수액에서 봉급의 비율을 높이고 수당 비율을 낮춘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이 급격히 인상된 점을 고려하여 상여수당을 감액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 보수규정에서 '봉급'과 '수당'의 성격을 구분하고 있지만, i) 상여수당은 기본급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ii) 2012년 취업규칙 변경도 기본급 인상과 함께 상여수당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iii) 상여수당은 모든 기간제 교원에게 동일한 비율로 지급되어 직무별 차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급과 상여수당의 연계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 A사의 정관이나 보수규정은 기본급을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액과 연동하도록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2012년 취업규칙 변경 당시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 A사는 2010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기본급을 직전 학년도의 보수표에서 정한 기본급 액수 이상으로 정하여 왔으므로, 기본급이 보수표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로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삭감 간의 대가관계를 부정한 판단은 타당하지 않은 점,
- 따라서 A사와 교직원들 사이에 기본급과 상여수당을 별도로 취급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012년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①기본급 인상이 이루어진 경위와 ②그 대가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고 ③임금 수준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는지 및 기본급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p>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심은 기본급 인상과 상여수당 삭감 간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임금체계 변경 시 전체적인 임금 수준이 유지되었는지, 기본급 인상이 이루어진 경위, 그 대가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기본급과 수당은 개별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총 보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상호 연계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수총액의 기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음. - 따라서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 해당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받고 있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반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님이 명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향후 근로자와의 법적 분쟁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임금 항목 간의 대가관계 및 연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금 수준 비교자료, 산정 근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금번 판결을 통해 기업이 임금체계를 개편할 때 법적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하고 최소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 여부뿐만 아니라, 변경되는 항목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 사전에 점검해야 함. - 즉, 임금 구조를 변경할 때 취업규칙, 근로자의 동의, 임금 항목 간 대가관계 등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